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51
----------	------

제출연월일 : 2023. 4.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개정이유

- 장기재직 공무원 포상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상조(장례)서비스 사업 실시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직원 후생복지 향상 도모
-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2022.3.2.)에 따른 기존 미취학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 삭제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안 제6조제4호 삭제
- 구체적인 대상을 적시한 장기재직 공무원 포상 지원
(안 제6조제7호 개정)
- 직원 상조(장례)지원 사업 근거 마련
(안 제6조제9의2호 신설)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6. 예산수반 사항 : 덧붙임(비용추계서)

○ 2023년 추가경정예산 반영 예정

○ 소요예산 산출 : 약 250,000천원

- 직원 상조(장례) 지원 사업 : $2,500,000\text{원} \times 100\text{명} = 250,000,000\text{원}$

7. 입법예고 : 입법예고 생략

○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법예고 생략

- 입법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 해당없음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 원안동의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총무과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77조”를 “「지방공무원법」 제77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복지혜택중에서공무원”을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복지혜택중”을 “복지혜택 중”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휴직중”을 “휴직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파견 중”을 “파견 중”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충족 시키기”를 “충족시키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정년 · 명예퇴직 · 20년 이상 장기재직 모범공무원(배우자 등 가

죽1인 포함)의 국내·외 시찰

9의2.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대한 상조(장례) 지원

제9조제4항 중 “기간내”를 “기간 내”로 한다.

제10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1조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연도내”를 “연도 내”로, “사용후”를 “사용 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도중”을 “연도 중”으로, “월단위”를 “월 단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조 제2항”을 “제3조제2항”으로, “월단위”를 “월 단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연도중”을 “연도 중”으로, “발생 하는”을 “발생하는”으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하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서 명		자치행정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 · 성명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팀장 직위 · 성명	후생복지팀장 곽주희
	담당자 성명 · 전화	양하나 (790-5174)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u> 하남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지방공무원법</u> 」 제77조-----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u>복지혜택</u> 중에서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 ----- <u>복지혜택</u> 중 에서 공무원----- ----- ----- ----- -----.
3. “기본항목”이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u>복지혜택</u>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3. ----- ----- <u>복지혜택</u> 중----- ----- -----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생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

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따
른 -----
-----.

1. -----
----- 휴직 중-----

2. ---- 파견 중-----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
충족시키기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

----- 범위 안--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범위 안-----

-----.

1. ~ 3. (현행과 같음)

4.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5. · 6. (생략)

7. 정년 · 명예퇴직 · 장기 재직 한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인 포함)의 국내 · 외시찰

8. · 9. (생략)

<신설>

10. (생략)

제9조(기본항목)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 · 자기계발 · 여가

<삭제>

5. · 6. (현행과 같음)

7. 정년 · 명예퇴직 · 20년 이상 장기재직 모범공무원(배우자 등 가족1인 포함)의 국내 · 외 시찰

8. · 9. (현행과 같음)

9의2.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대한 상조(장례) 지원

10. (현행과 같음)

제9조(기본항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기간 내-----

-----.

제10조(자율항목) -----
----- 고려하여 -----

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
으로 구성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시
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
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
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
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요비
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생 략)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
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
다.

③ 연도중에 신규채용·복직 등
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
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
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직위해제·면직·해
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
는 파견은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

-----.

제11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

----- 범위
안-----

-----.

제13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연도 내-----
----- 사용 후 -----

-----.

③ 연도 중-----

----- 월 단위-----.

④ -----

----- 제3조제2항-----

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 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7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월 단위-----
-----.

⑤ ----- 연도 중-----
----- 발
생하는 -----
-----.

제17조(수당) -----
---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 10

나. 비용 발생 요인(안)

○ 직원¹⁾ 상조(장례) 지원 서비스 지원 1인당 250만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안)

○ 직원 상조(장례)지원 서비스 250만원×100명×1회 = 250,000천원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소요액		250	250	250	250	250
직원 상조(장례) 서비스 지원	본인	250	250	250	250	250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시비 100%)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최 용 호

1) 공무원(임기제 포함), 시의원, 공무원직, 청원경찰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세 출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250,000
하남시청 직원 (공무원, 시의원, 공무원직, 청원경찰)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25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250,000
	지방세	125,000	125,000	125,000	125,000	125,000	625,000
	세외수입	125,000	125,000	125,000	125,000	125,000	625,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췌서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